

남북한 교류와 민간통일운동*

郭台煥**

귀한 환영의 말씀을 해주신 조문부 제주대 총장님! 그리고 동아시아연구소의 김부찬 소장님과 사회를 맡아주신 고성준 교수님!

오늘 학술회의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이 지역의 내외귀빈 여러분!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오늘의 대학별교수 통일문제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세미나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에게 영예로운 기회를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기조연설로서 말씀드릴 주제는 「남북한 교류와 민간통일운동」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김대중 정부는 출범 이후 거창한 통일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남북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정착시키는데 우선 역점을 두면서 근원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당장 법적인 통일(*de jure* unification)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주력하기 보다는 남북한 교류와 화해·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도모해 나간다는 것이 대북포용정책의 요체인 것입니다.

남북한간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한 분야부터 남북한 교류를 어떻게 촉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한 교류를 통한 협력의 추진은 바로 평화적 통일과정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한 교류의 활성화야말로 상호 이익과 민족의 복리를 통해 남과 북이 반세기에 걸친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이 체제불안과 흡수통일을 우려하여 대남적대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남북한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부터 남북한간의 접점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방법입니다.

남북한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민간차원의 비정치적인 남북경협과 교류가 우선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정경분리원칙이 일관되게 추구되면서 남북한의 교류가 양적·질적으로 활성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몇 가지 예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남북 협력사업으로서 남북관계에 있어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분단 이후 최대규모의 협력사업으로서 남북한간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를 수반하였고, 1998년 11월 18일 관광개시 이후 2000년 3월 21일로서 관광객 20만명(외국인 포함)을 돌파하였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관광객의 규모를 떠나 남북한 사업주체들이 장기간을 요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협의·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89년 약 1,800만 달러 규모로 시작된 남북교역은 1999년에 연간 3억 3천만 달러로 북한의 대외무역의 20%를 차지했고 앞으로 북한의 대남무역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협력의 사업분야도 다양화되고 증가 추세에 있

* 본 연설문은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히고자 합니다.

** 통일연구원 원장·국제정치학 박사

으며,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도 원활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북포용정책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중단되었던 문화·예술·체육분야의 남북한 왕래행사를 가능토록 하여 제3국 행사 위주로 개최되어 오던 기존 사회문화교류 추세에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1998년 「리틀엔젤스 평양공연」과 「윤이상통일음악회」가 성사되었으며, 1999년에도 MBC, SBS 등 여러 단체에 의해 「합동음악공연」이 성사되었습니다.

체육분야에서도 1999년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통일농구경기」가 성사되었으며, 12월에 북한 농구단이 서울을 방문한 가운데 제2차 통일농구경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지금까지도 정부차원의 교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의 교류가 그동안 많이 활성화되었지만 여전히 남북한간 정부당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남북한 교류는 정부와의 조화·협조 속에서 개인 및 민간단체들의 역할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방안이 절실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민간통일운동의 역사는 비교적 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4·19 이후 활발히 진행되던 민간통일운동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암흑기를 맞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철저한 반공정책을 표방하면서 남한의 민간통일운동을 탄압해 나갔습니다.

5·6공화국을 거치면서 민간통일운동은 제한적이거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두환 정권이나 노태우 정권 모두 정통성 결여로 대내외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표방함으로써 그 부담을 희석시켜 보려는 의도가 없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정부도 나름대로 교류협력의 중대와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지만 북한핵문제 등 여러 가지 도발적인 사태를 겪게 되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태도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집권 후기에 가서는 일관되지 못한 행보를 보였고, 그결과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포함한 대북교류·협력활동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는 대북포용정책을 기반으로 정경분리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민간통일운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민간차원의 대북교류와 협력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선 민간통일운동의 활동은 지난 시기에는 보수적 관변단체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되던 것과는 달리 진보적 재야 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강화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진보와 보수 양단간의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민간단체들의 통일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물론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이 지나치게 산발적으로 추진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정적인 여파를 최소화하고 각 민간단체가 염원하는 효과적인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단체들의 활동과 토론이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법·제도와 문화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민간단체들간의 활동을 조화롭게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메카니즘의 구축과 의식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통일운동의 과제를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민간단체의 적절한 통일운동이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준비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민간단체의 대북교류 협력 및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구축하는데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간단체들은 국가의 통일정책에 대한 대안 혹은 보완으로서의 의미를 지녀야 하며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환기시키고 남북한의 동질성을 찾아나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단체들은 국가의 통일정책에 관한 역할과 기능을 보완·연장하고 때로는 비판하는 기능을 심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단체들은 국가를 대신하여 통일 또는 대북관련 과제를 실천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역할도 주도해 나가는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운동과 캠페인, 혹은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뛰어넘어

생산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의 통일정책에 대한 대안 혹은 보완기능을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의 활동분야에 대한 전문화와 세분화가 병행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대북사업과 통일운동을 전문화하고 세분화하는 길이 정부와 민간통일운동의 역할을 분담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학술회의에서 남북한 교류와 민간통일운동에 관한 건설적인 비판, 그리고 생산적인 토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민간통일운동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의 논의는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회의가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에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주최측과 참석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